

#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충남의 발전전략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최 민 호

## 1. 시작하는 말

지난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취임으로 「참여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축복과 기대 속에서 출발하는 정부이지만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도 산적해 있어 「참여정부」에 부여된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다.

대내적으로는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따른 도덕적 위협,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와, 이라크전쟁 위협, 동아시아 경제 펀더멘탈(fundmental)에 대한 재위협 등 어려운 상황이 동시중복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참여와 개혁으로 요약되는 국정운영의 기조아래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구체화시키면서 대내외적 위협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 글의 목적은 새롭게 출발하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지역차원에서 해석하고 우리도가 당면한 과제와 연계시켜 국정운영의 지역적 합의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추진과제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5년 임기 동안 「참여정부」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설정했고, 국정원리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제시했다. 이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새 정부가 5년간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표라고 하겠다. 「참여정부」의 청사진이기도 한 취임사를 크게 요약하면 동북아시대 중심국가건설, 북핵·한미관계, 정치·경제·사회개혁의 세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분야는 동북아시대 중심국가건설이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20%나 되고, 인구가 유럽연합(EU)의 4배가 넘는 상황에서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경제적·지리적 이점을 살리면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라는 틀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만큼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륙

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과거에는 그로 인한 고통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 보다 적극적,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나가자는 의미이다.

동북아 시대의 꿈을 실현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에 직결되어 있다. '선(先) 북핵포기, 후(後) 대북지원'이라는 원칙하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경제·사회개혁과 관련해서 노대통령은 먼저 부패없는 정치·봉사하는 행정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경제에 있어서는 공정경쟁과 투명성 확립을 통해 시장경제원리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분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교육개혁, 계층간 격차해소, 국민통합, 5대 차별해소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하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은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분권·분산·분업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그런 토대위에 국가통합을 추구할수 있도록 지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할 때이다.

### 3.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에 부응한 우리道の 발전전략

우리道는 지난 3월 7일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큰 흐름인 참여와 개혁을 지방행정 시각에서 재조명하여 야심찬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우리道を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 「동북아시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열린 도정」, 「혁신 도정」, 「책임 도정」을 지향가치로 삼아 10대 실천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열린 도정」의 구현 -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추진할때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터 도민, 전문가, NGO,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정책 패널」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도민과의 대화」를 과제별 「도민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홈페이지를 통한 정책제안과 설문평가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 자치 네트워크 구축」과 「민·관 합동 도정 평가제도」도입을 통해 도정의 환류와 책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②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 분권」 실현** - 민·관 합동의 (가칭)「지방분권연구회」를 설치하여 자치제도 개선과 자치역량강화 과제를 발굴하여 道政에 반영시키면서, 지방분권 시각에서 道와 시·군간 「相生 관계」를 정립시키고자 「道권한의 시·군 이양 추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대학·연구소·기업과 함께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성화 시책을 마련하는 등 새정부의 「지역혁신」 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대학 특성화 학과지원, 관학협력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대학 육성시책을 전개하는 한편, 광역권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권협의회」·「환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등 광역행정을 위한 기구 등을 확대하면서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③ **「신행정수도」건설 지원**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기획단」을 가동시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수요가 늘어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전력, 통신 등 인프라의 소요판단과 확충계획을 검토하여 행정수도 입지발표와 동시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

④ **차세대 미래인재 양성** - 전국 최초로 「도비 해외유학제도」실시와 함께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道內 서북부 지역에 외국어로 생활하고 교육하는 「외국어 전용교육촌」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청양대학·농업 테크노파크에 실업계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도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⑤ **「동북아 경제권」거점 확보** - 보령·당진항 배후지역에 물류·비즈니스 중심의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를 개발하여 동북아 허브 인천의 보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해 상품전시관을 중국시장 공략 거점 지역으로 삼아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안내륙을 연결하는 충청선 철도를 비롯하여 항만 및 경비행장 유치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한·중 환황해권 자치단체 연합체 구성을 충청남도가 주도하여 동북아권 문화 관광벨트 구축과 행사 예방대책 등에 대한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⑥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역량」강화** -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신산업을 클러스터화 하고, 특히 미래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CT(Culture Technology)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공주·부여 지역에 문화산업단지조성, 백제문화콘텐츠은행 운영, 충남문화산업 지원센터 설립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⑦ **「地方次元의 과학기술 혁신」** - 과학기술 예산을 현재 道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에서 2006년에는 2%까지 증액하고, 과학기술전문가·지역대학 이공계 교수·산업체 대표로 「과학기술혁신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가칭)「충청권 과학기술 진흥연구원」을 설치하여 대덕연구 단지·오송바이오 단지와 함께 충청권

R&D 트라이앵글 체제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정보교환의 場으로 活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실버 과학기술인 타운」을 계룡 신도시 지역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⑧ **충남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 - 「충남농업 3대 비전, 5대 혁신과제」를 고부가가치 농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여 본격 추진하고, WTO체제 출범이후 감소하고 있는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한 「농어업 소득보전 특별법」제정의 추진과 함께 녹색관광마을 조성, 산림의 생태공원화 등 다양한 농외 소득원을 개발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⑨ **「참여복지와 양성평등」 실현** - 올 상반기 중에 「참여복지 5개년 계획」, 「환경보전 종합대책」, 「5대차별해소대책」 등 3대 종합복지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도민이 삶의 질 향상에 주체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보건·복지·환경·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한편, 지방차원의 「양성평등 사회」 실현 대책도 수립하여 가족제도 개선과 여성사회 참여확대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⑩ **「책임경영 행정」의 강화** - 성과관리제도 정착 연구단을 가동하여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키면서, 회의를 「보고 → 지시」스타일에서 「토론」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도지사와 6급 공무원간 정례적인 정책토론회, 실·국별 수요토론회, 직장협의회와 도간부간 정례간담회 등 하의상달식 의사 전달 체계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유형별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전대비, 사고수습,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대비키로 하였다.

#### 4. 맺는말

참여와 개혁으로 요약되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앞으로 우리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 충청남도의 미래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제시되었던 참여정부의 정책 대강이 현재 각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도는 10대 실천과제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책임관으로하여 46개 전략시책별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책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도 시책에 대한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여 새정부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소요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으며 도자체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행정력을 집중시켜 구체화해나갈 방침으로 있다.